

# 건설동향브리핑

CERIK

제789호  
2021.1.11

## 정책동향

▣ 2020년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선정 : 기대와 한계

## 시장동향

▣ 지난해 해외건설 수주, 57% 오른 351억 달러

## 산업정보

▣ 영국 노후 인프라 민간투자사업의 특징

▣ 건설업 이미지 현황과 개선 방안

## 건설논단

▣ 건설공사 재난공제, 사회안전망에 포함해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 2020년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선정 : 기대와 한계

- 공공주도 방식 여전, '도시재생 정책 실패론' 확산 속 획기적 정책 방향 전환 필요 -

### 2020년, 3가지 신규 '재생수단'을 활용한 도시재생 뉴딜 '시즌 2' 본격화

- 2020년, 총 3차례에 걸쳐 117개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를 선정함. 2020년에는 기존 '시즌 1'에서 추진했던 사업유형이 대폭 축소(총 47개소)되었으며, 반면 '시즌 2'에서 새롭게 도입된 신규 재생수단이 주(主) 사업수단으로 본격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했음(총 70개소).
  - 2017년 현 정부 출범 후 시작된 도시재생 뉴딜사업('시즌 1')은 당초 5개 사업유형(경제기반형, 중심시가지형, 일반근린형, 주거지지원형, 우리동네살리기형)으로 추진돼 왔음.
  - 하지만, 도시재생 사업의 체감가능한 성과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반영하여 2019년 8월 「도시재생법」 개정을 통해 혁신지구재생사업(이하 혁신지구사업), 도시재생 인정사업(이하 인정사업), 총괄사업관리자방식 등 3가지 신규 '재생수단'을 도입하여 사업 실행력을 강화하고자 했음.
  - 이후 2019년 12월, 3가지 신규 재생수단을 활용한 시범사업지 18개소를 선정하였으며, 2020년부터 신규 재생수단을 주(主) 사업수단으로 활용하는 '도시재생 뉴딜 시즌 2'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음.

<표 1> 2020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 개요

구분	유형	계획	1차 선정 (9월 17일)	2차 선정 (11월 4일)	3차 선정 (12월 21일)	사업유형별 실제 선정지 개소 수		
기존 사업 방식	일반근린	50개소 내외		33		47개소	47 개 소	
	주거지지원			4				
	우리동네살리기			10				
신규 재생수단	총괄사업 관리자	15개소 내외			1	24개소	70 개 소	
			경제기반					9
			중심시가지	4				1
			일반근린	4				5
	주거지지원							
	혁신지구재생사업	5개소 내외			2	2개소		
도시재생 인정사업	50개소 내외	15		29	44개소			
총계		120개소 내외	117개소					

자료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사업신청 가이드라인 등을 취합하여 저자 작성.

1) 신규 재생수단을 활용하고 공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실행력을 높인다는 "도시재생 뉴딜 시즌 2" 공론화 과정에는 변창흠 국토교통부장관 (前 LH 사장), 황희연 LH 토지주택연구원장 등 도시재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인사들이 상당한 영향을 끼쳐 왔음.

■ **유의미한 정책 방향 전환 목격되나, 공공이 ‘공급자적 시각’을 바탕으로 주도하는 한계 여전히**

- 일부 선정 지역에서 전면철거형 정비사업 연계시행, 대학 등 민간기관과의 협업 강화 등 주거 환경 개선과 산업경쟁력 강화 등 실질적인 도시재생 효과가 기대되는 시도를 보여주고 있음.
  - 각각 공공주택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연계해서 추진 예정인 대전 동구와 부산 동구 재생사업의 경우 모두 공공이 주도하는 전면철거형 재개발 방식으로 쪽방촌 등 낙후 주거지를 정비할 예정임.
  - 이는 과거 ‘전면철거형’ 정비사업과 ‘고쳐 쓰는’ 재생사업이 마치 물과 기름처럼 정반대의 사업 방식으로 이해되며 서로 연계 없이 추진되는 것에서 상당한 정책 변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 이 밖에도 경기 하남과 광명에서 공기업 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이 계획되어 있는 등 총괄사업관리자 방식을 통해 공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소규모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 정비사업 방식 외에도, 서울시, SH공사, 고려대학교가 협업하여 창업기반을 조성하는 사업 등 민간이 보유한 자원과 장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의 사업도 추진 예정임.
- 하지만, 공개된 자료를 통한 대략적 분석 결과<sup>2)</sup> 총사업비의 93%가 공적 재원으로 구성되는 등 여전히 공적 자원 위주로 사업이 계획된 것이 확인되며, 이는 3가지 신규 재생수단에 서로 유사한 것으로 파악됨. 반면, 민간투자액은 총사업비의 7%에 그칠 예정이며, 그중에서도 특히 도시 활성화를 위해 ‘필요성 높은’ 민간투자는 상당히 제한적일 것으로 보여짐.
  - 혁신지구사업, 인정사업, 총괄사업관리자방식은 제도적으로도 공공 주도로 사업이 추진되게 되어있으며, 현시점에서는 구조적으로 민간부문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투자가 일어나기 힘든 상황임.<sup>3)</sup>
  - 민간부문 투자의 경우 대부분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낮은 주택사업에 한정될 것으로 예상됨. 공공주택사업(민간투자 2.1천억 예정)과 연계 추진되는 대전 동구 중심시가지형 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민간투자 0.4천억 예정) 등이 민간투자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반면 민간부문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창의·효율·기업가 정신이 요구되는 업무, 상업, 첨단산업 시설 조성 등과 관련된 민간투자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표 2> 2020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사업비 분류**

구분	총계	공적 자원					민간재원
		마중물예산	부처연계	지자체 자체예산	공기업	주택도시기금	민간투자
1차	1.2조원	국비 : 2.2천억 (부처연계 포함) 지방비 : 2.5천억 (부처연계 포함)			3.9천억	0.5천억	2.5천억
2차	1.7조원	6.7천억	2.7천억	4.5천억	2.4천억	0.6천억	0.3천억
3차	2.6조원	7.2천억	0.9천억	3.9천억	11.0천억	2.0천억	0.8천억
<b>총계(%)</b>	<b>5.5조원(100%)</b>	<b>5조 1천억(93%)</b>					<b>3.6천억(7%)</b>

자료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취합 및 담당자 문의를 통해 저자 작성.

2) 자세한 사업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아서 알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활성화계획 등이 고시·공고된 후에 확인 가능함.

3)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동향브리핑 738호(혁신지구사업), 739호(인정사업), 752호(총괄사업관리자방식) 참조.

- 혁신지구사업 등에서의 공공부문 투자 역시 중장기적인 전략 속에서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을지, 충분한 도시재생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임. ‘공급자적 시각’을 바탕으로 ‘수월한 지역’에서 ‘수월한 방식’으로 ‘단기적 가시적 성과’ 위주로 사업이 추진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큼.
  - 혁신지구사업의 경우 토지 권원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미·저이용 국공유지를 중심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인정사업 역시 유사한 이유로 미·저이용 국공유지를 활용해서 추진하거나, 위험건축물이나 장기방치 건축물 개선사업 중심으로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 이는 도시재생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필요한 사업’보다는 토지 권원확보 등이 ‘수월한 사업’이나 ‘안전상 시급한 사업’ 중심으로 사업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함.
  - 사업내용 또한 혁신지구사업을 포함한 여러 도시재생 사업지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공부문이 직접 ‘창업지원센터’, ‘창업지원 공간’, ‘창업지원 임대주택’ 등을 설립·운영할 예정이나, 투입재원 대비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파급효과에 충분한 기여를 할 수 있을지 의문임.

### ■ 도시재생 정책 실패론 확산…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책 대전환 필요

- 최근 서울시 창신승인, 가리봉 등에서 도시재생 사업에 실망한 주민들이 공공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등 도시재생 정책 실패론이 확산되고 있음. 야심 차게 추진 중인 혁신지구사업 또한 단순 공공주도 복합개발사업, 즉 ‘혁신 없는 혁신지구사업’에 그치지 않을까 우려됨.
- 기본적으로 도시재생에서의 공공부문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함.
  - 지금과 같이 공공부문이 도시재생 사업의 (거의) ‘유일한 엔진’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 전략수립과 조정자 역할에 더욱 충실하고, 더불어 전략적이고 효율적으로 공공 재원을 투자하는 ‘공공기업가’ (public entrepreneur) 역할을 수행할 필요 있음. 이를 통해 한정된 공공 재원이 민간투자 유치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함.
  - 실제 영국의 경우 ‘민간투자 유치를 위한 공공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매우 강조했다. 2000년대 Sheffield 시의 경우 계획수립 단계부터 도심재생을 위한 필요 사업비의 82.1%를 민간부문으로부터 유치할 계획을 수립하고, 공공투자는 이를 위한 마중물 목적으로 전략적으로 활용함.<sup>4)</sup>
  - 혁신지구사업의 경우, 성공한 혁신지구로 평가받고 제도 도입 당시 벤치마킹했던 보스턴의 Innovation District와 Kendall Square, 바르셀로나의 22@barcelona 모두 공공부문의 역할은 제한적이었고, 민간부문의 적극적 참여와 협력을 통해서 진정한 ‘혁신’이 창조될 수 있었다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 있음.
- 주거지 재생사업의 경우 소수의 목소리가 아닌, 지역 내 다수 주민과 주택시장 수요자들의 보편적 주거환경 선호도에 대해 더욱 귀 기울일 필요가 있음.
  - 선호도와 만족도가 낮은 집수리, 소규모 정비사업 등에 지나치게 치중하는 것을 지양하고, 동시에 획기적인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은 민간주도 중·대규모 정비사업 수단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이태희(부연구위원 · thlee@cerik.re.kr)

4) Evans et al. (2007) “Sheffield One Evaluation: Final Report”, European Institute for Urban Affairs.

## 지난해 해외건설 수주, 57% 오른 351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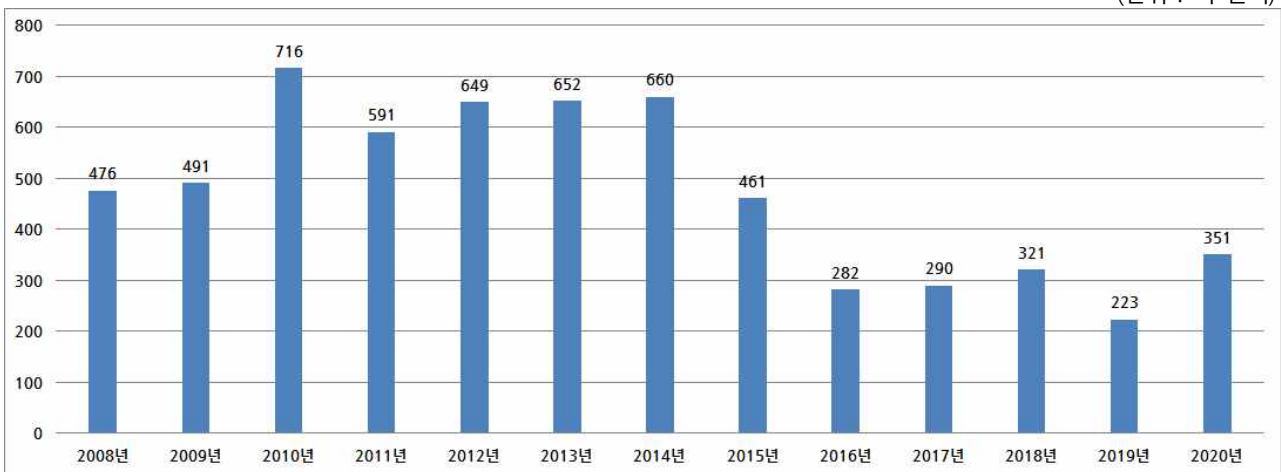
- 코로나에도 최근 5년 중 최고 실적, 향후 백신 상용화에 따른 경제회복세가 중요 -

### 2020년 해외건설 수주는 351억 달러로 전년 대비 약 57.4% 증가

- 2020년 해외건설 수주는 코로나19 대유행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128억 달러가 증가한 351억 달러를 기록함.
  - 연초 300억 달러 달성에 대한 긍정적 전망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중반 이후 실적 증가세가 위축되기도 했으나, 총 567건의 사업 수주를 통해 최근 5년 중 최고 실적을 기록함.

<그림 1> 해외건설 수주실적 추이

(단위 : 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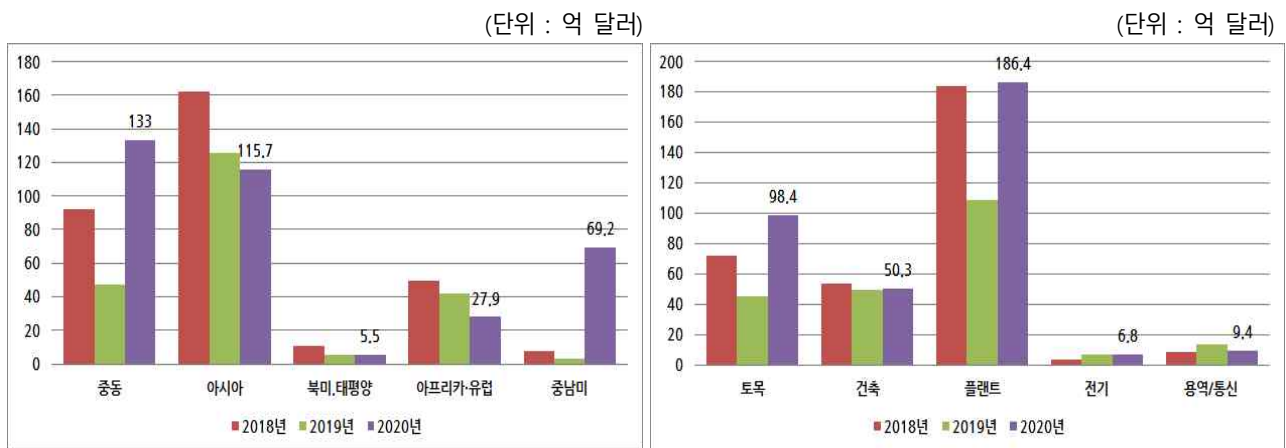
자료 :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

### 지역별로는 중동과 아시아가 전체의 70.8%, 공종별로는 플랜트 부문이 전체의 53.1%

- 2019년 47.6억 달러를 기록하며 2017년 수주의 1/3 수준에 그쳤던 중동 지역이 2020년에는 전년 대비 179% 증가한 133억 달러를 기록함.
  - 2019년 125.4억 달러를 기록한 아시아 지역은 115.7억 달러로 전년 대비 약 8% 감소했음. 중동과 아시아를 합하면 248.7억 달러로 2020년 전체 수주의 70.8%를 차지함.
  - 2019년에 2.8억 달러에 그쳤던 중남미 지역은 올해 69.2억 달러로 수주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함. 중남미 지역의 연간 수주가 60억 달러를 넘었던 해는 2014년, 2012년, 2011년이었으며, 10억 달러가 넘는 실적을 거둔 해는 올해를 포함해 10회에 불과함.

- 2019년 108.7억 달러로 2018년과 비교해 약 41% 감소했던 플랜트 부문은 186.4억 달러로 반등에 성공하며 전체 수주의 53.1%를 차지함.
  - 2019년 45.4억 달러를 기록했던 토목 부문은 98.4억 달러로 전년 대비 117% 증가하며 전체 수주의 28%를 차지함. 한편, 건축 부문은 전년 대비 1.2억 달러가 증가한 50.3억 달러로 전체 수의 14.3%를 차지함.

<그림 2> 최근 3년 지역 및 공종별 해외건설 수주실적



자료 :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

### 중소건설기업의 연간 수주는 11.9억 달러로 전년 대비 4.8억 달러 감소

- 해외건설 수주의 특성 중의 하나이면서 경쟁력 약화의 요인으로 평가받는 중소기업의 해외수주는 전체 수주의 반등에도 불구하고 감소함.
  - 2015년 39억 달러를 기록한 이후 중소기업의 해외수주는 2020년까지 5년째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2020년 수주는 지난 2006년(13억 달러)보다 낮은 수준임.
- 지역별로 보면 아시아가 5.6억 달러로 가장 많으며, 중동과 유럽이 각각 3억 달러와 2.1억 달러를 기록함.
  - 공종별로는 전기 부문이 4.4억 달러, 플랜트 부문이 2.4억 달러, 건축과 토목이 1.9억 달러와 1.5억 달러를 기록함.
- 2020년 연간 수주 351억 달러 중에 중소기업의 수주 비중은 3.3%로 이는 2019년까지의 해외건설 누적 수주에서 중소기업 수주가 차지하는 평균 비중 8.9%보다도 낮음.
  - 전체 수주에서 대형 건설기업의 높은 비중은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지만, 올해와 같은 극단적인 중소기업의 수주 위축은 장기적으로 수주경쟁력 약화의 원인이 됨.



2021년 해외건설 시장의 관건, 코로나19 백신의 상용화와 그에 따른 경제 회복 본격화

-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에 따르면 2020년 -4.3%의 역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계 건설시장은 2021년 7.6%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 지역별로는 미국과 유로존 등 선진국 건설시장은 5.8%, 인도와 중국 등 신흥국은 9.2%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 국내 건설기업 주력 시장을 살펴보면 중동은 경기 부양책에 따른 건설투자 확대로 2021년에 2.6%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특히, 2022년부터 2025년까지는 5.7~5.8%의 높은 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부진과 국제유가 하락으로 신규 투자가 위축됐던 교통 인프라와 에너지 분야의 성장세가 두드러질 전망이다. 특히, 아시아와 중동을 중심으로 친환경 에너지, 환경, 석유화학 및 정유 프로젝트의 발주 증가가 예상됨.

<그림 3> 중동 건설시장 성장률 추이 및 전망



자료 : 이베스트투자증권

- 건설시장에 대한 긍정적 전망의 근거는 코로나19의 대유행 종식과 그에 따른 세계 경제 회복의 본격화임. 하지만,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세 지속과 백신 접종 및 경기 회복 지연 등 여전히 불확실성을 확대하는 요인들이 산재해 있음.
  - 코로나19로 인한 회복세의 속도와 크기는 다를 수 있지만, 해외건설 시장은 작년보다 발주환경이 개선될 것임. 때문에, 작년 코로나19로 인해 이동 제한 등으로 원활한 수주 영업 활동을 할 수 없었던 점을 감안해 이를 만회할 수 있는 수주 전략의 수립과 시행이 필요함.

손태홍(연구위원 · thsohn@cerik.re.kr)

## 영국 노후 인프라 민간투자사업의 특징

- 명확한 시설물 관리 기준 제시와 사업비 최소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

### ■ 런던 Hounslow Highways Maintenance and Management PFI

- Hounslow Highways Maintenance and Management PFI는 런던 Hounslow Highway를 보다 깨끗하고, 안전하며 자연 친화적인 고속도로 구축하기 위해 사업시행자가 25년 기간 동안 자치구 내의 연장 432km, 인도 762km의 모든 도로 네트워크를 유지관리하는 프로젝트임.
  - 주요 사업내용은 Hounslow Highway의 교통 네트워크 관리(management), 가로등, 신호등, 교량 및 구조물과 도로 부속물 등의 개량(rehabilitation), 유지 관리, 차도 및 보도 개선 및 교체(배수로 등 포함), 고속도로 환경 관련 유지 및 관리, 개선 프로그램 설계 및 건설, 도로 청소 등임.
- 영국 교통부(Department for Transport)와 재정부(HM Treasury)는 3.5억 파운드의 PFI 크레딧 또는 자금 지원, 25년간 매년 1,400만 파운드를 제공하며, PFI는 인프라 개선을 위해 초기에 1억 파운드를 투자함.
  - 정부 투자분은 인프라의 품질 향상 및 결손 복구와 장기적으로 인프라의 사용 기간 개선과 그에 따른 이익을 위한 비용임.
  - PFI는 159개 자치구(council)의 기존 관리 인력들의 고용 유지와 공공 책임 및 25년 동안의 모든 네트워크 상태 문제 등에 따른 위험 등을 책임짐.
- Hounslow Highways Maintenance and Management를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한 4년 이후 도로의 자산가치는 7,100만 파운드에서 7.8억 파운드로 10배 이상 증가함.

### ■ Sheffield City Council Highway Maintenance PFI Project

- 약 12억 파운드의 민간자본을 활용하여 Sheffield시 전역에 있는 고속도로 시설(연장 약 2,000km, 350개 교량 및 구조물, 35,000 가로수, 69,000 가로등)의 개량 및 유지 보수를 PFI 사업으로 추진한 사례임.
  - 사업시행자가 25년 동안 광범위한 고속도로 유지보수 프로그램(노후화된 차도, 인도, 가로수, 교량 등 구조물의 개량과 유지 보수 업무)을 수행함.
- 주요 핵심 요구 사항은 CCI(Carriageway Condition Index)<sup>5)</sup> 수준에 부합하는 차도 개량



및 유지 보수(Carriageway rehabilitation and maintenance), FCI(Footway Condition Index)에 부합하는 보도, 자전거도로 등 개량 및 유지 보수(Rehabilitation and maintenance), 영국과 EU의 관련 기준을 준수하는 가로등 개량 및 유지 관리(Street lighting rehabilitation and maintenance) 등임.

- 그 외 Street Force가 수행하는 지역 통행 플랜 수립에 대한 설계 및 건설업무를 수행하고, 2007년 홍수 같은 재해 등의 긴급 상황시에 주무관청에 대한 지원을 요구함.

### ■ Priority School Building Programme(PSBP)

- 44억 파운드 규모의 PSBP는 수선이 필요한 학교를 대상으로 중앙에서 관리하는 프로그램임.
  - 이 프로그램으로 261개의 학교가 개선되고, Education Funding Agency(EFA) 기준에 부합되는 수준으로 추진됨. 대상 학교 들은 지역, 상업적 실행가능성(commercial viability), 요구 조건 등을 고려하여 묶여서 처리됨.
  - DBFO(Design-Build-Finance-Operate) 방식으로 추진되고 운영 기간은 25년임.
- PSBP는 PF2 방식<sup>6)</sup>으로 조달하며, 규모의 경제를 최대화하기 위하여 중앙에서 조달을 추진함. 또한, 비용 최소화를 위해 시간, 비용, 절차를 간소화하는 'lean procurement principles'이 적용되고, PF2 방식에 따라 공공부문이 출자하며, 장단기 부채 시장의 접근성 개선과 거래비용을 낮추는 aggregator model을 적용함.

### ■ 영국, 민간자본을 활용한 노후 인프라 개선을 위해 구체적 기준 제시와 지원

- 영국은 민간자본을 활용하여 노후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해서 유지관리의 구체적 기준 제시와 더불어 사업비 최소화를 위해 다양한 방식을 시도하고 지원함.
  - 민간자본을 활용하여 일상적인 유지관리를 추진하기 위해 CCI, FCI와 같은 구체적 유지관리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사업모델에 적용함.
  - PSBP의 경우 규모의 경제 유도를 위해 중앙에서 조달을 추진하고 사업을 집단화하였으며, 사업 추진 시간의 절감과 비용 최소화를 위해 'lean procurement principles', 'aggregator model'을 적용함.

엄근용(부연구위원 · kyeom@cerik.re.kr)

5) 스캐너(SCANNER), 트레이스(TRACS) 등과 같은 장비를 통해 도로 표면 상태(크랙, 홈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측정하여 나타내는 값으로 지수값에 따라 빨간색, 노란색, 녹색으로 평가함.

6) 기존 PFI 방식과 PF2 방식의 차이는 PF2 방식에서 PPP사업에 정부가 일정 부분 지분 투자를 하고 또한 건설기업이 금융차입 외에 자기자본 투자를 하는 부분에 있어 차이가 있음.

## 건설업 이미지 현황과 개선 방안

-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9%가 '건설업 이미지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해 -

### ■ 건설업, 부정적인 이미지 여전히 존재해?

- 건설업은 전체 GDP의 14.5%<sup>8)</sup>(2019년 건설투자 기준)를 차지할 정도로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크지만 여전히 3D(더럽고(dirty), 어렵고(difficult), 위험한(dangerous))산업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존재하고 있음.
  - 건설업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산업 내 우수 인력의 유입을 저해하고 산업에 대한 투자를 감소시켜 지속가능한 성장을 약화시킬 수 있음. 따라서 지속적인 이미지 개선 활동을 통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해야 함.

### ■ 설문조사 결과 건설업은 '기업윤리', '성실시공', '근로환경' 이미지 개선이 가장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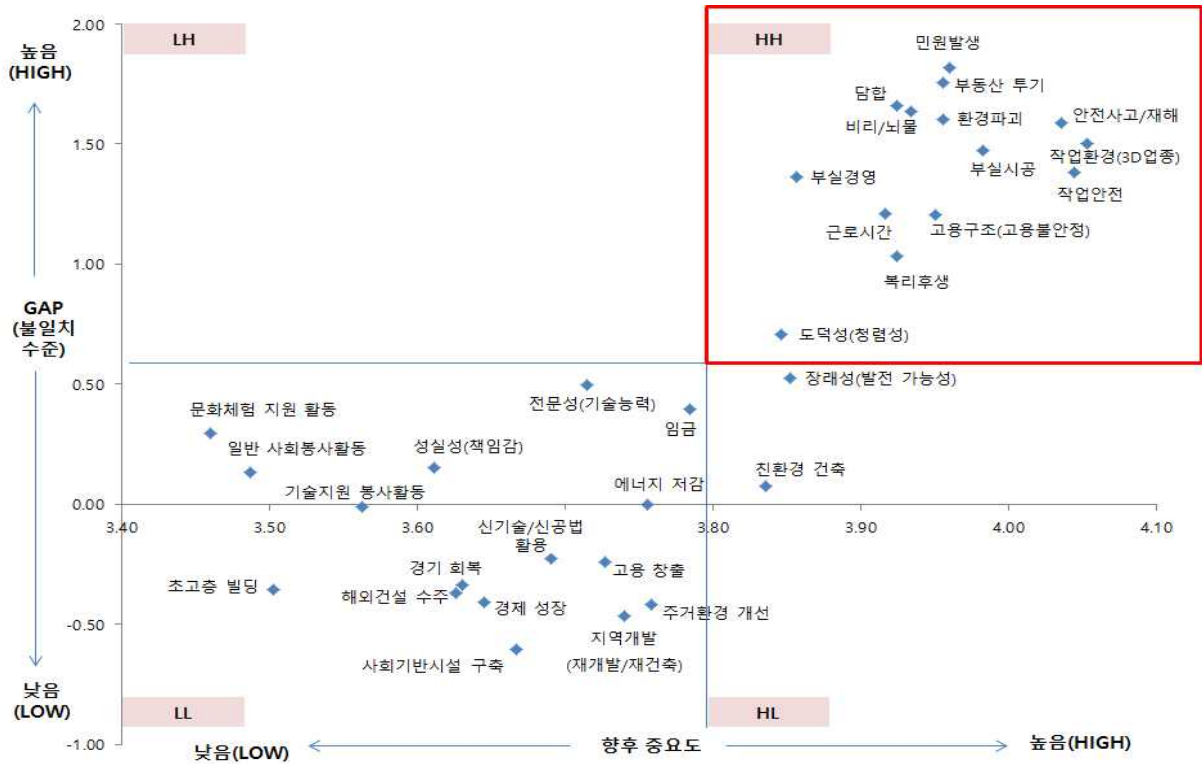
- 건설업의 이미지 현황 및 개선 방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sup>9)</sup>, 건설업의 이미지 개선이 필요하냐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89.0%가 '필요하다'라고 답함.
  - 건설업의 이미지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이유가 무엇이라는 질문에는 '건설업은 부정부패, 뇌물 등 비윤리적이라는 인식 때문'이라는 응답이 1순위, '건설업은 3D산업이라는 인식 때문에'가 2순위, '건설업 취업시 워라벨을 추구할 수 없을 거 같아서'가 3순위로 꼽힘.
- 또한, '부실시공', '안전사고/재해', '민원 발생', '비리/뇌물', '담합', '부실경영', '환경파괴', '부동산 투기', '도덕성', '복리후생', '근로시간', '작업안전', '작업환경(3D업종)', '고용구조(고용 불안정)'와 관련된 부분이 향후 건설업 이미지 개선을 위해 중요한 요인이나 현재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그림1> 참조).
  - 특히, 일반인의 경우 기업윤리와 관련된 '비리/뇌물', '담합', '부실경영', '환경파괴'에 대해선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게 나타남.

7) 본 내용은 '최은정(2020), 건설업 이미지 현황 및 개선 방안,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보고서의 내용을 일부 요약한 것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본 보고서를 참조.

8) 한국은행 국민계정(2015년 기준), 원계열 실질 자료.

9) 본 조사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2020년 11월 1일부터 20일까지 3주간 총 235명(건설업 종사자 124명(52.8%), 일반인 111명(47.2%))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임.

<그림1> 건설업 이미지 키워드별 갭(GAP) 분석



주 : 1) 5점 만점을 기준으로 각 항목의 평균을 낸 결과로 GAP(불일치 수준)은 향후 중요도-현재 수준의 값으로 차이가 클수록 앞으로 중요하지만 현재 수준은 떨어짐을 의미함.  
 2) 요구 수준은 각 항목의 평균을 기준으로 평균보다 클 경우 H(높음), 평균보다 작을 경우 L(낮음)으로 값을 부여한 결과로 HH일 경우 불일치 수준이 높으며, 향후 중요한 항목이라고 할 수 있음.  
 자료 : 최은정(2020), 건설업 이미지 현황 및 개선 방안,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한편, 건설업의 이미지 개선 필요성에 대해 모두가 공감하고 있었지만 이를 위한 활동은 주로 사회공헌 활동에 맞추어져 있어 이미지 개선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남. 즉, 실제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주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일회성으로 끝나는 활동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건설업 이미지 개선을 위해 민관 협의체 구성을 통한 공동의 노력 필요**

● 현재와 같이 개별 기관이 산발적으로 사회공헌 활동에 편중하여 이미지 개선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기보다는 민관이 협의체를 구성하여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필요한 사업 선정 및 역할 분담을 통해 건설산업에 대한 이미지를 새롭게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이는 궁극적으로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임.

최은정(연구위원 · kciel21@cerik.re.kr)

## 건설공사 재난공제, 사회안전망에 포함해야

현재 국내에는 각종 재난 발생시에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는 30여 개의 책임보험이 존재한다. 그러나 건설산업은 다른 산업보다 높은 재난율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공사 수행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과 건설관계자를 구제할 수 있는 포괄적인 의무공제(보험)는 찾아볼 수 없다. 다만 200억원 이상의 정부 발주공사 수행시 정부에 제출할 건설공사조립공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등이 있을 뿐이다.

'건설공사 재난·안전 의무공제' 제도의 부재는 민간 공사와 정부 발주의 소규모 공사에서 재난이 발생할 때 피해자를 구제할 효과적인 수단이 없음을 의미한다. 더불어, 피해자의 경제적 곤궁으로 인한 가정불화로 이어질 가능성 또한 높아진다.

특정 공제(보험)제도가 의무화되고 정착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대형 사고 등 제도 도입을 공론화하는 특별한 계기가 필요하다. 하지만 건설공사의 특성상 대형 재난이 발생한 뒤에 피해를 복구하려면 엄청난 사회적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고 발생 전에 제도를 선제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제도의 도입으로 예상되는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타인에게 신체·물질적 피해를 주었을 때 스스로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돼 피해자를 빨리 구제할 수 있게 된다. 둘째, 피해자에 대해 마땅한 손해배상의 수단이 없을 때 건설공사 재난·안전 의무보험은 가해자의 재무능력을 담보해 피해자 보호

권을 강화할 수 있다. 셋째, 건설 재난 발생에 대비한 공제시장이 미성숙한 경우 대규모 건설 재난에 대한 손해배상비용이 사회로 귀착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러나 건설공사 재난에 대한 의무공제 제도가 도입되면 재난의 원인 제공자 등에게 공제가입을 의무화함으로써 사회·경제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 같이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는 등 제도가 도입되고 안착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경제적 부담 해소가 전제되어야 한다. 또, 난관 극복을 위해서는 정부의 주도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잠재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효율적으로 구축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의무다. 건설공사 재난·안전 공제의 도입 또한 동일한 맥락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건설공사를 수행하며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효율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정부는 건설공사 재난·안전 의무공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더불어, 공공 발주공사에 대한 재난·안전공제 가입 비용을 부담하고 시공능력 평가시 가점 등의 부여를 통해 민간 발주공사에 대한 재난·안전 의무공제의 정착률을 높여야 한다. 선진 복지국가로의 도약을 위해서는 국민의 안전이 가장 우선되어야 함을 정부는 잊지 말아야 한다 <파이낸셜뉴스, 2020.12.21.>

임기수(연구위원 · kslim@cerik.re.kr)